

호남 반도체산업 투자... 일각 "포퓰리즘 정치"

오는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후 "尹정권때 입지 공식 확인" 국힘 "SNS 뱀매 삼은 말정적" 손 "MB-차 덕분 반도체 성과" (전일채)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 대해 보수 논객인 전일채 변호사가 "이재명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하이닉스 회장이 이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각각 400조원이 넘는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청와대가 주도해 삼성전자와 SK 등 국내기업들이 총 1000조원 이상 규모의 비수도권 첨단산업 투자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이날 공개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이는 역대 어떤 투자계획보다 큰 국내총생산(GDP)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로,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한 이재명 정부가 국정통역 타개책으로 통명한 '포퓰리즘 정치'라고 혹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현재 이재명 정부는 자정 업자 폐업자수가 연간 10만명을 넘어서고, 1500만대 중반의 고환율이 누노말로 자리 잡으면서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여기에 주식시장 급변동으로 2030 청년층과 4000 서민층의 민심이 이반되어 테드크로스를 맞이하자 대중의 환호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문학적인 숫자를 동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공장에 필수적인 산업용수와 막대한 전력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컬"이라며 "아이러니컬 증은 자신들이 얼마나 무능한 집단인지를 모르는 데 진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과 함께 충청권 동남권에 로봇과 AI데이터센터 유치 계획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무엇보다 배후도시가 없어 정주 여건이 갖추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급 인적 자원을 어떻게 유인할 것인지에 대한 초보적인 해법조차 없다"고 날을 세웠다.

전 변호사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성과'를 강조한 데 대해서도 "이재명 정권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반감을 드러냈다. 이어 "MB와 박근혜 정권 시대 삼성전자·SK하이닉스 경영진의 결단(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강조하면서 "문제인 정권 역시 자급의 반도체 패권 잔치에서 방심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성을 그쳤다. 특히 그는 "포퓰리즘 시대를 연 박영수 특검은 사실상 삼성특검이었다"라며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수사라인은 이재명이 '승계 권'을 봐달라"는 "목시적 칭찬"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공동체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탄 흔련을 말의 임대료를 뇌물이라며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기름값 두 달만에 1900대로 28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앞 휘발유 가격이 거세게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L당 1991원으로, 2개월여 만에 1900원대로 돌아섰다. /연합뉴스

이 "이 사건은 광주 박근에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함께 정적 23년을 선고한 뇌물죄의 트러거가 됐고 삼성그룹은 19개 범죄에 모두 무죄를 받기까지 무려 9년간 법정을 오가며 허송세월, 반도체 패권을 공고히 할 기회를 놓쳤다"면서 "그러나 적어도 문재인과 윤석열 두 정권은 이 문제만큼은 같은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호남권 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관련해 "2023년 국민의회 운영 대통령 재임 당시 국민의회 정부에서 이미 공식 확인한 일"이라며 "최소한 국민의힘 의원들끼리는 호남 반도체 산업 입지에 대해 이상한 말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X계정에 지난 2023년 시행된 산업통상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공모 과정에서 광주·전남이 최우수 등급을 획득

한데 내용은 '인근 장소와 담양호 등 풍부한 산업용수 공급망은 물론 호남권 태양광·풍력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남·광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필수 요건인 RE100실현이 가능한 최적지'로 꼽혔다는 내용의 기사를 각각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당시 공모 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남은 탈락하고, 경기 용인·경북과 경북 구미가 반도체 특화단지로 최종 지정됐다.

특히 국민의힘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에 관련해 "반도체 패권을 지키기 위해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고 날을 세우며 논란을 야기한 데 대해 "국민을 함락해야 할 대통령의 언어"라며 "반도체 정책 공개 토론에 직접 나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과 우려했던 이재명을 통해 "국민 우려의 비판에 대해 할 대통령이 반대하는 국

민 의견에 얼마 전 '바깥'에 비유한 데 이어 이번에는 '돼지'를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또다시 논란을 자초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더욱이 이 대통령은 반도체 클러스터 논란에 하루 동안 SNS에 다섯 차례나 글을 올리며 연일 반박에 나섰다"며 "국가적 현안을 두고 국민과 토론하기보다 SNS를 방패 삼은 이재명식 말 정치에 국민은 한숨만 내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 주변에는 정책을 설명할 정책 참모와 대변인도 없나, 이번 대통령직 직접 SNS에 글을 올리는 게 국정 운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라며 "정책에 자신이 있다면 국민 앞에 나서 질문에 답하는 게 책임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국민적 의문과 우려를 대표해 공개 토론에 임하겠다"고 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경기도, 남양주 다산 국민임대 150가구 공급

내일부터 예비입주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남양주시 다산순화로 311에 위치한 다산 포스트2단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150호를 오는 30일부터 7월2일까지 모집한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 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대 3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 가구소득 70% 이하여야 하며, 소

득·자산 기준 및 유형별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관리센터를 통해 30일부터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현장 접수할 수 있다.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다산 포스트2단지 임대사무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다산 포스트2단지 국민임대주택은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세종 기자 cjs7749@siminilbo.co.kr

'G3 서울 기획위원회' 공식 출범 글로벌 TOP3 도시 도약 본격화

시, 오는 9월 비전 발표

총 10개 분과체계 운영

서울시가 민선9기 서울의 미래를 설계할 최상위 정책기획기구인 'G3 서울 기획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서울을 글로벌 TOP3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G3 서울플랜'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

'G3 서울 기획위원회'는 향후 4년간 서울시정의 비전과 전략을 설계하는 민관 협력 플랫폼이자 민선9기 정책 청사진을 그리는 핵심 기구다.

서울시는 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도시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G3 서울플랜'을 마련해 서울의 새로운 성장 비전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G3 서울플랜'의 G3는 'Global Top 3 도시'를 의미한다. '글로벌 TOP3,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비점으로 향후 4년간 추진할 전략과 목표'와 '서울의 미래상을 대표하는 8종 다목적특산물'을 소개하고 시장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밝혔다.

위원회는 서울의 미래 비전과 성장전략을 구체화하고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정책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과 제도로 연결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발전시켜 'G3 서울

플랜'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약 70일간 집중 운영된다.

시는 위원회 출범에 앞서 김병민 전 서울시장 정무부시장과 이창우 현안연구회 도시공학과 교수를 'G3 서울 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위원회는 약 95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시민 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별 분과와 시장 핵심 의제를 다루는 3개 특별분과 등 총 10개 분과 체계로 운영된다.

7개 분야별 분과는 ▲건강활력 도시 ▲주거인정도시 ▲교통혁신 도시 ▲미래경쟁도시 ▲동행성장 도시 ▲글로벌매력도시 ▲안전환경도시로 구성되며, 분야별 정책 목표와 핵심과제, 실행방안을 도출한다.

3개 특별분과는 ▲비전총괄분과 ▲첨단특별분과 ▲균형발전특별분과로 구성된다. 비전총괄분과는 서울의 미래상과 전략체계를 총괄 조정하고, 첨단특별분과는 '주거·일자리·AI·고밀 해소 등 청년세대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의제'를 집중 논의한다.

시는 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는 9월 'G3 서울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선9기 시장 비전과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압도적 경쟁 프로젝트' 추진체계를 함께 공개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연중 과제 차량 합동단속

인천시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도로 파손 방지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역내 향남을 중심으로 과적 차량 합동단속과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과적이 빈번한 인

천향 주요 향남 출입 화물차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중부경찰서, 인천향남공사, 관할 구청 교통과, 명에과적감시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단속과 병행해 진행한 캠페인에서는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과적의 위험성과 불법성, 도로 파

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납비 사례 등을 안내하며 자발적인 준법운행을 유도했다.

도로법에 따르면 축 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을 넘는 차량은 과적 차량으로 분류되며, 위반행위와 횡수로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도로시설을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연중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계도 중심의 예방활동도 함께 펼치고 있다.

향후에도 민인 발생지역과 주요 도로를 수시로 선성해 집중 단속을 이어가며 시민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과 캠페인을 통해 화물 운전자들에게 과적 운행을 위험성과 도로 파손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며 "운송업체에서도 자발적인 안전운행 문화 정착에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인천·문천 기자 mcs@siminilbo.co.kr

강 화 군

강화도농특산물

해풍의 따스함과 자연의 신선함, 청정바다의 기운까지 담아
 오뎀되지 않은 강화 그대로의 맛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 식탁에서 건강하고 신선한 맛을 즐기세요.

**꼭 만나보고 싶은 강화의 맛
최고의 셰프는 강화입니다**

“참을성과 당도가 뛰어나요!”

“맑은 해풍은 맛맛을 결정해요!”

“저염에도 유산균이 많아요!”

강화도농특산물
강화도농특산물

강화도농특산물
강화도농특산물

강화도농특산물
강화도농특산물

강화도농특산물은 강화군수가 보증합니다